

드론 부문 무자격자 참가...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 '황당'

산업용 드론 제어 참가 기준도 확인 안해...수년간 무자격자 입상 등 허술 부산항공청 "드론 면허증 없으면 불법"...광주 10팀 중 4팀 대회 도중 탈락 참가자들 불만 속 산업인력공단 "2021년 국토부 질의 때 문제 없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수년간 기능경기대회를 치르면서 '무자격 참가자'를 모집해 드론 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대회 참가 기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치르다 무자격자를 입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해 무자격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허술한 운영으로 대회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으로 치러지는 드론 대회의 무자격자 참여 여부를 수년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한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공고에서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으로 치러진 '산업용 드론 제어' 대회 참가팀(10팀) 중 4팀을 경기 중 제외시켜 탈락 처리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의 '무자격자 대회 참가 불가' 지적에 따른 조치로,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법을 위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던 4개 팀 참가자들을 탈락시켰다.

앞서, 부산항공청은 전남 '광주 기능경기대회'에서 면허증 없이 드론을 날리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광주기능경기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항공안전법(125조 1항)은 '무게 250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

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에 사용되는 드론 기체중량은 16kg, 이륙중량은 24kg으로, 드론을 운영할 경우 2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산업인력공단은 그러나 대회 참가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는 커녕, 개최 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참가자들이 대회에 참여했다가 세 차례의 경기 도중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와 산업인력공단은 특히 '산업용 드론 제어' 종목이 시범 도입된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참가자를 모집해 경기를 치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 무자격 참가자들이 경기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고 전북도도 '자격 보유 여부 제한 사항'이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자를

포함해 대회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드러나고 있다. 광주 대회는 경기 중 무자격 참가자를 탈락시켰지만 전남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 전북도도 대회 참가가 허락되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기능경기대회의 부실한 운영 행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기능경기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별다른 자격 기준을 달지 않은 채 대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 탈락 처리된 참가자들도 '황당한 운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 모인 공모문에도 자격증 관련 요구 사항이 없었고, 과거에도 자격증 없이 출전했는데도, 이번 대회에서 중도 탈락시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전남의 한 고등학교 지도교사 A씨는 "기능반 학생들이 주말과 휴일 없이 준비했는데 접수할 때나 대회 시작 전에 사전 공지도 아닌 대회 도중에 갑자기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

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대회가 중단됐다는 설도 나온다. 이는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누구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회 윤리헌장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회 개최 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첫 시범 대회를 치르기 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땅에 묶어 놓고 드론을 날리는 계류식일 경우에는 비행 승인과 자격 증명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지도와 통제 하에 경기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계류식과 상관없이 비행위치나 무게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고 무게가 250g 이상이 되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단 측의 주장과 달리 과거 서면으로 오간 문서가 없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5월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공동 성명서 내고 강력 규탄

5·18 민주화운동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죄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5·18 정신을 훼손하는 한 권한대행의 이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법제처장은 독재와 권위주의의 길을 걷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국정 운영 등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은 5월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자정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사)오월어머니집과 (사)5·18서울기념사업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 권한대행은 5·18 변절자 이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이 법제처장은 5월 영령 앞에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제처장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행정 소송과 그의 장모 최은순 사건을 대리했으며 2022년에는 윤석열의 대선캠프 활동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법조 실세들과 회동하며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는 대책 회의를 하고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이 법제처장은 윤 정권 내란잔당들의 '브레인'으로 내란 세력의 핵심인사 중 하나가 돼 헌재 내란 공범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세"라고 지적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내가 읽은 책 속 감동의 한 줄은 도서관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유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함께 읽는 '책 속 한 줄 릴레이'에 참가한 이용객들이 책 속 감동의 한 줄을 옮겨 적어 붙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21일~5월 2일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 2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 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한다.

/연합뉴스

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의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당시 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여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항소 이유서를 보면 여전히 피해자 맞을 하는 등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